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 전문가회의서 검토...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임명 지지 모즈타바, 아버지 후광 '실세'...권력 세습 반발 가능성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 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고자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사진을 들고 있는 이란 시민.

연합뉴스

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

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 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연합뉴스

## 트럼프 "세계 각국, 기존 무역합의 원해"

### 새로운 차등관세 발표 계획...150일 동안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

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미국 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부과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관세)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그들은 그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고,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